

카카오·텀블러

#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집중

2011년~올해 6월  
방통위 통신심의 현황 자료  
심의위 시정요구 3배 증가  
선제적 대응 필요

인터넷상에서 성매매·음란 정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보는 포털 중에서는 카카오에, SNS 중에서는 텀블러에 가장 많이 게재돼 시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통신심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불법·유해정보(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기타 법령위반)에 대한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는 2011년 5만3485건에서 2015년 14만875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의 시정요구(1~6월)까지 시정요구는 7만5591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시정요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불법·유해정보의 절대량이 갈수록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2011~2013년 '도박'·2014~2016 '성매매·음란'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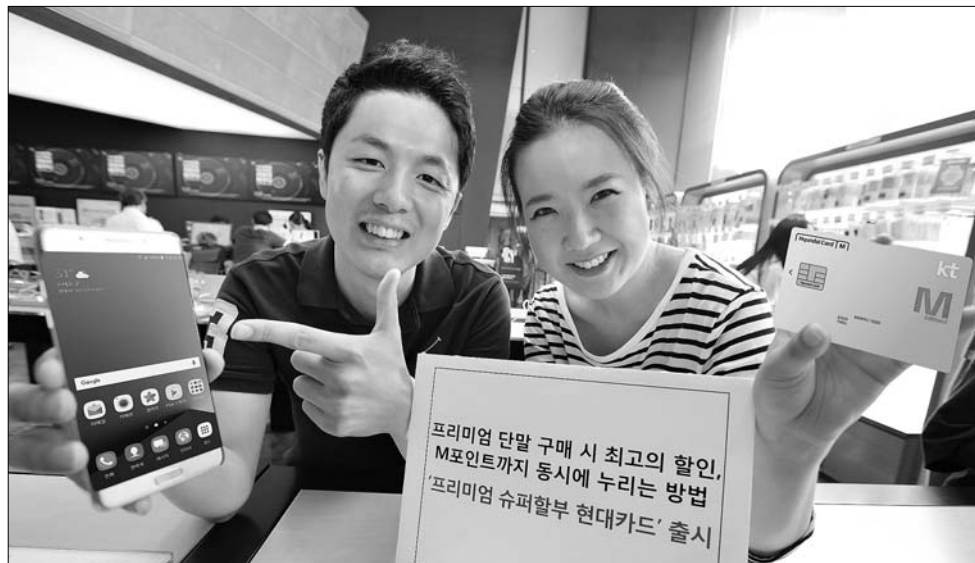
불법·유해정보 유형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고 2014년부터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도박 정보는 2011년 2만1138건, 2012년 2만1880건, 2013년 3만5899건, 2014년 4만5800건, 2015년 5만399건, 2016년 6월 2만3074건으로 증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도 같은기간 9343건, 1만4085건, 3만2330건, 4만9737건, 5만695건, 2만4572건으로 늘었다.

권리침해는 668건, 1572건, 3135건, 2085건, 5379건, 3449건으로, 불법 식의약품은 1만7014건, 2만1189건, 2만2204건, 2만1885건, 2만6071건, 1만6322건으로 집계됐다. 기타 법령 위반(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등)은 5322건, 6279건, 1만832건, 1만3377건, 1만6207건, 8174건이다.

### ◇ 네이버 '권리침해'·카카오 '성매매·음란정보'·구글 '도박' 시정요구 많아

사업자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



KT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 출시

할부카드'는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단말 구매 비용의 일부(10만원 이상)를 할부 결제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할인 받는 카드다.

KT가 현대카드와 제휴해 휴대폰 구매 시 할인과 현대카드의 M포인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는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단말 구매 비용의 일부(10만원 이상)를 할부 결제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할인 받는 카드다.

구를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카카오가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은 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네이버보다 많은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네이버는 2013년을 정점으로 시정요구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시정요구건수는 2011년 4494건, 2012년 7059건, 2013년 8675건, 2014년 4866건, 2015년 6105건, 2016년 6월 3247건이다.

카카오는 같은기간 1426건, 3764건, 7408건, 8781건, 8017건, 2962건으로 증가했다. 구글은 460건, 764건, 2696건, 4921건, 3141건, 1926건이다.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2년까지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3년부터는 카카오가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2014년부터 시정요구가 현격히 줄었다. 시정요구건수는 2011년 1353건, 2012년 2238건, 2013년 3238건, 2014년 577건, 2015년 319건, 2016년 6월 95건이다.

반면 카카오는 같은기간 734건, 2022건, 5431건, 4465건, 5635건, 2008건으로 시정요구가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카카오의 자체적인 노력은 미진하다"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가 자율심으로 걸러낸 성매매·음란 정보는 모두 2694건으로 같은기간 시정요구 1만9561건의 8분의 1 가량에 불과했다"고 했다.

권리침해 정보의 시정요구는 2013년

까지도 카카오가, 2014년부터 네이버가 많았다.

네이버는 2011년 34건, 2012년 69건, 2013년 226건, 2014년 69건, 2015년 1455건으로 시정요구가 급증했다. 같은기간 카카오는 66건, 77건, 387건, 31건, 90건, 20건으로 집계됐다.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4년부터 구글에 집중됐다. 구글은 2014년 2282건, 2015년 1367건, 2016년 6월 3건을 요구받았다.

최 의원은 "양대포털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4만553건, 카카오 5만3374건 등 자율심의 통해 꾸준히 불법도박 정보를 스스로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 ◇ 텀블러 '성매매·음란정보' 급증

SNS에서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2015년까지는 트위터에 시정요구가 집중되다 올해는 텀블러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는 트위터의 2배를 넘어섰다.

트위터는 2011년 25건, 2012년 233건, 2013년 3589건, 2014년 9839건, 2015년 1만165건, 2016년 6월 205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텀블러는 2012년 13건, 2013년 245건, 2014년 780건, 2015년 9477건, 올해 6월 5483건으로 증가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11건, 2014년 48건, 2015년 36

건, 올해 6월 8건, 인스타그램은 2015년 9건, 올해 6건이다. 시정요구 건수가 적은 것은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개 수준 등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트위터보다 쉽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최근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범람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방통심의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뉴스

### KB국민카드

#### 추석 선물세트 할인 이벤트

KB국민카드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등에서 KB국민카드로 추석 선물세트를 사면 할인해준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29일까지 KB국민카드로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구매하면 최대 30%를 할인해준다.

선물세트 구매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50만원 이상이면 2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당 5만원(최대 50만원)을 해당 마트의 상품권으로 증정한다.

또 GS수퍼마켓과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추석 선물세트를 10~40%를 싸게 살 수 있다. 구매한 가격에 따라 상품권도 주고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뉴스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내년 313만명”

한은, 올해 280만명 14.6%—내년 16.3%로 높아질 것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2017년엔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이는 2010년(4110원)대비 57.4%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자수 분포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2017년 16.3%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

타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방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계수도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고,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 “교통사고 신고제로 결격자 걸러내야”

'신고제 활성화 필요' 보고서... "치매환자 54.6% 운전"

운전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이들 10명 중 5명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조사와 함께 이를 걸러내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272명 중 1년 후 10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54.6%)에 이르렀다. 치매환자 등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격을 부여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미약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을

겪는 자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했다.

또 치매나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등의 경우 편견과 불이익으로 질환은 폐 및 진로 기피 경향도 뚜렷하다. 조사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보험회사 등이 나서서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통사고 신고는 의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2014년 교통사고 90만 5822건(80% 이상)건이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마무리 됐다.

운행 중인 차량만 파손된 것이 명확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법원 역시 '신고의무는 중상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차로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뉴스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